



CONSTRUCTION NEWS

재해율감점제 1분기부터 폐지

정부, 산재 예방효과 미흡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
입도부문의 재해율 감점제가 내년
1분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등
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재해율이 입·낙찰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결정,
재해율 감점제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미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1분기에 PQ심사
요령이 개정되는 대로 재해율 감점제가 폐
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재해율 감점제 대신 산재은폐
건수에 따른 감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
련해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분기에 PQ심사 요령이 이 같
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이 개정안이 확정되
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Q신인도의 재해율 감점제는 당초 산
재가 적은 업체를 우대해 산재를 줄이려
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입·낙찰 때 불
이익 회피를 위한 산재 은폐만 양산시킬
뿐 재해 예방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돼 왔다.

특히 산재발생을 사실대로 신고한 업체
는 입·낙찰 때 불이익을 받고 재해 은폐
등을 통해 재해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업체
는 오히려 우대받는 제도적 결함도 지적됐
었다.

실제로 공사실적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실제 노무비율이 높은 기업 등은 재해율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인
경미한 재해까지 재해율 산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그동안 재해율 산
정방식을 실제로 재해가 발생한 내용이 정
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건설업계는 우선 재해율이 입·낙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가감
점 방식을 가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재경
부에 회계예규 개정을 건의했고 하수급인
이 발생시킨 재해는 하수급인의 재해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는 방안도 제시했었다.

또한 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전예방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를 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했다.

건협은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가 입찰에
서 우대받기 위해 재해율을 의도적으로 왜
곡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사전 재해예방 노
력을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재가 줄어
들 것이란 주장을 폈었다.

이는 산재 사고 대부분이 안전조치 미흡

에 따른 것으로 재해율 감점제도는 산재은
폐 등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판단에
서였다.

한편 노동부는 매년 1,0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만 고시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로 추
정근로자 수를 적용해 왔으며 업체 규모,
공종 등에 따라 재해율을 왜곡시키거나 실
제 재해발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계약제도 확대 시행

주공,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공사, 물품
요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온라인 상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주공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전기, 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전자계약을 모든 공사, 용역, 물품(지급
자재 포함) 구매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공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입찰인 화성태안3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평장동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부터 적용
했다.

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본사에
서 직접 조달하는 물품구매, 용역은 지난



해 12월 19일 입찰공고분부터 전자계약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공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온라인상에서 주공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계약체결 업체가 본사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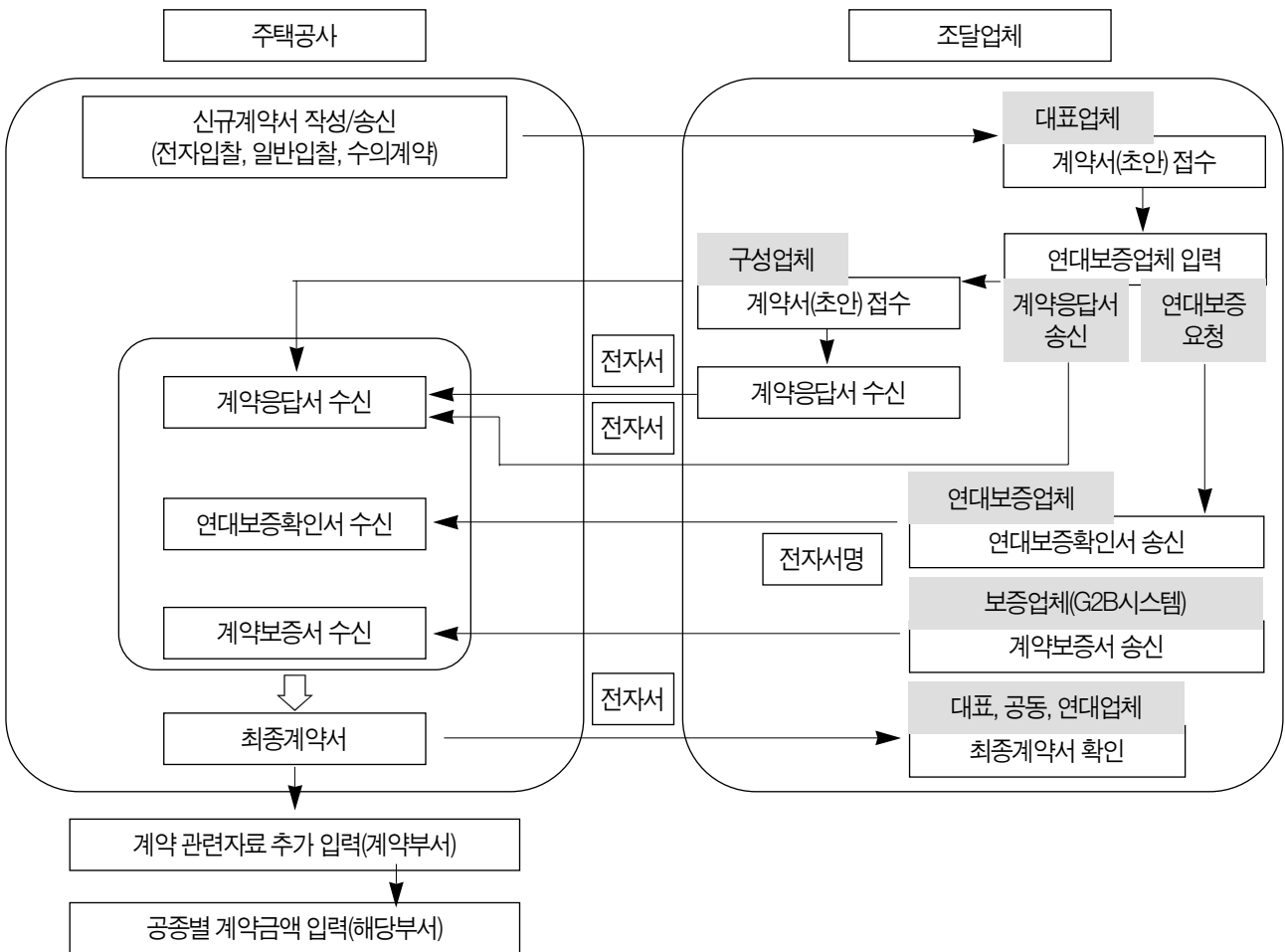
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소정 양식의 계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한 종이문서로 계약업무가 처리돼 왔다.

전자계약이 시행되면 본사나 지역본부 방문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정부 수입인자가 면제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종이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은 35만원, 10억원 미만은 15만원 짜리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주공 관계자는 “전자계약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계약업체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계약 흐름도〉



CONSTRUCTION NEWS

건설업 근로시간 안줄 었다

통계청, 제조업과 임금차는 커져

지난 2004년 건설업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마련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지난 2004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4시간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0.1시간 늘었다.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7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0.2시간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은 0.2시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1시간 줄었다.

또 산업별 임금수준은 제조업을 100으로 할 때 전기·가스수도업이 176.9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은 98.1로 지난 2003년의 99.5에 비해 오히려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총주택 수는 1,298만8,000가구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68.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주택건설실적은 46만4,000가구로 이 중 공공부문이 12만4,000가구, 민간부문은 34만가구이며 공공부문 건설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건설

은 26.7%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주택건설투자비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은 5.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태양광아파트 내년부터 공급

정부, 대체에너지로 각광 13조 시장 성장 전망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발생, 이용하는 태양광 아파트가 내년에 첫선을 보인다. 그동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돼 오던 태양광 주택이 아파트에도 시범 적용되면서 향후 아파트에 대한 확대 적용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 설비 적용이 연구, 검토되기는 했지만 실제 적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나 제한된 설치면적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 적용을 시작으로 정부주도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이고 이후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석유 에너지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이 태양광 아파트의 출현으로 이어진 것이다.

△ 내년 태양광아파트 1,400가구

기획예산처는 최근 내년에 64억원을 지원, 서민 임대아파트 1,4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중인 김천 덕곡지구, 삼척 건지지구, 청주 성화지구 등 서민 임대주택 1,400가구를 설계변경해 발전설비를 공급하게 된다.

내년에 국내 최초의 태양광 아파트가 선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태양광주택 보조예산을 올해 160억원보다 238% 증가한 54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는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476억원으로 증액해 추가로 2,000가구의 태양광주택을 보급, 아파트와 일반주택 총 3,400가구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주택주가 빛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발전기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7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3kW용량의 태양광주택 발전설비(반영구적) 설치에 3,000만원이 소요되면 국가가 70%인 2,100만원을 보조하고 주택주는 30%인 9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3kW급 기준으로 월 300kW 소비시 6만원으로, 이는 주택주



의 투자비 900만원을 약 12.5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총 10만가구의 태양광주택 보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사업비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해왔으며, 내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으로 전환, 지원할 예정이다.

△ 2012년까지 10만가구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총 10만가구(아파트, 일반주택 포함)의 태양광주택 보급을 추진함에 따라 주공의 태양광 아파트도 내년도 시범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내년 시범적용 사업의 과정을 지켜보고 산자부의 태양광주택 보급계획에 따라 향후 몇 년간 태양광아파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공의 분양아파트나 공공 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 임대아파트가 태양광설비 적용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태양광아파트는 산자부 등 정부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따른 것으로 30년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등 정부소유 건물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을 취지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주공측의 설명이다.

고가의 태양광 설비는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 임대주택에 한정해 설치하고 대체에너지 보급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측면

이 크다는 것이다.

△ 저층아파트·다세대 활성화

태양광 아파트의 첫 보급이 국가주도의 공익적 측면이 크지만 국내 태양광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건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공 관계자는 “설치면적 확보가 어려운 만큼 초기에는 공공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5층 정도의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도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급이 확산되면 지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도 태양광 발전시장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을 감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 경제성 떨어지는 게 흠

일반 주택에 대한 태양광설비 보급이 비교적 활발한데 비해 아파트에 대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데 이유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 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옥상에 한정, 가구 수에 비해 설치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 가구당 태양광 전기를 충분히 나눠쓰는 데는 무리가 있다.

내년도 첫 선을 보이는 주공 태양광아파트도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일부분을 충족시킬 뿐이다.

한 가구 전기 사용량이 1일 1.5~2kW라고 하면 태양광으로는 약 155인 1가구당 0.3kW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 주공측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가 태양광 설비투자비를 전기료 절감분으로 회수하는 데 12.5년이 걸리는 등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도 만만치 않다.

단독주택의 경우 3kW급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 거의 전기료를 내지 않고 생활하는 데 비하면 아파트에 태양광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경제성이 뒤쳐진다.

또한 태양광 집광설비인 모듈을 자체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2개사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 전량 수출되고 있어 태양광을 모으는 모듈은 모두 수입해 설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품에 의존,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태양광 발전 아파트를 가로막는 요인이 돼 왔다.

건설사들이 태양광 아파트에 대한 연구, 검토를 거쳤음에도 실제 적용을 주저한 데는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했다.